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유족 “21세기에 계엄이라니”

40주기 맞아 광주서 추모행사
민주묘지·힌즈페터 정원 참배
광주 참상 목격 부친 건강 악화
“계엄, 권력 유지 무도한 판단”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이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독립기자 힌즈페터를 태우고 광주를 누볐던 고(故)김사복씨의 유족들이 그의 40주기를 맞아 광주를 찾았다. 유족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면서 이번 12·3계엄사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19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김사복씨의 40주기를 맞아 장남 김승필(65)씨 일가족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후손과 관련 단체가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김사복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5월20일부터 21일, 그리고 23일부터 24일까지 두차례 독일 공영방송 ARD 특파원인 위르겐 힌즈페터를 태워 광주를 누비며 당시의 참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씨의 도움으로 힌즈페터가 촬영한 광주의 참혹한 현실은 이후 ‘광주비디오’로 제작돼 전국에 퍼졌고,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광주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김사복씨는 깊은 후유증에 시달렸고, 결국 1984년 12월19일 암으로 세상을



19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구묘역 위르겐 힌즈페터 기념정원에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김사복씨의 유족들과 김사복추모사업회 관계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을 떠났다.

그동안 김승필씨 혼자서 광주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아내와 아들이 함께 광주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참배에 앞서 역사신문에서 ‘광주의 억울함을 전한 부친의 소신을 잘 전하는 아들이 되겠다’는 글귀를 남겼다.

추모탑 앞에 헌화를 마친 김씨 가족과 유공자 후손들은 문재학·윤상원 열사의 묘비를 참배한 뒤 구묘역에 있는 위르겐

힌즈페터 기념정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힌즈페터의 머리카락과 손톱 등 유물이 묻혀있는 묘역을 한참 들여다보던 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친의 행적들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처음 광주를 다녀 오시던 날 ‘어떻게 군인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할 수가 있느냐’며 화를 내셨다”며 “광주의 참상을 두눈으로 지켜본 아버지는 이전보다 술을 자주 드시기도 하고, 어

머니와 다름이 늘어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도 많이 힘들어하시다가 급격히 몸이 쇠약해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회상했다.

김씨를 비롯한 유공자 후손들은 이번 12·3계엄사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이번 계엄사태를 보며 21세기에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어 큰 충격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매

주 국회의사당으로 나갔다. 비상계엄 선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무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곳의 오월영령들의 희생과 역사의 엄중함이 권력에 저항할 힘이 됐다.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한강작가의 말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구한 결과”라며 “계엄사태 이후 진실과 정의를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광주로 향했던 아버지의 소신을 전하는 일이 곧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민주경찰’ 고(故)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씨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경찰 수뇌부가 내란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아버지를 포함한 44년전 전남경찰들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고, 많은 곤욕을 치렀다. 선배 경찰들의 정신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 서구 풍암윤리성당에서는 김사복추모사업회가 주관한 ‘김사복 바오로 선종 40주기 추모 미사’가 진행됐다.

김선웅 풍암윤리성당 신부가 집전한 미사에는 유가족과 천주교 신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사는 김 신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생전 김씨의 모습과 행적이 담긴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한국노총 대구 회원 46명, 광주서 ‘집단 식중독’

점심·저녁 식사 후 구토 증세 호소
서구·북구보건소 역학 조사 착수

영호남 달빛동맹을 위해 광주를 찾은 한국노총 대구본부 소속 간부와 회원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광주 서구와 북구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대구본부 간부와 회원 54명 중 46명이 집단 설사와 구토, 발열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영호남 달빛동맹 노사한마음대회’를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당시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점심으로 육회비빔밥, 콩나물, 무생채, 맑은 고기국을 먹었으며 저녁식사는 서구에서 삼겹살과 김치찌개에 반주를 곁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대구본부 관계자

30여명이 구토와 발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대구로 돌아갔다. 이들 중 일부는 한때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는 등 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참석자 전원에게 보건소 등 진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했고, 함께 식사를 한 54명 중 46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 서구 보건소가 역학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해당 식당의 종업원 4명의 인체 검체와 식품 및 환경 검체 15건을 채취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 결과까지는 2주가 소요된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점검 결과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에 나설 것이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이 기자

광주시·전남도,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

권익위 행정·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광주 청렴체감도 5등급 ‘꼴찌’
광주시·전남도교육청 하위 등급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평가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권익위가 발표한 ‘2024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청렴 체감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5등급에 그치며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4등급으로 추락한 뒤 올해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에서 지난해 3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1단계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외부 민원인과 공직자가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2단계 하락한 5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 평가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다.

전남도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을 기록했지만 청렴노력도가 3등급으로 올라서며 종합청렴도가 반등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해 남구를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모두 하락했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보다 2등급 떨어진 4등급에 그쳤다.

전남도의 경우 보성군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차지하고 순천시와 지난해 이어 올해도 2등급 성적표를 받은 반면 무안군과 함평군은 나란히 5등급을 받으며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전남교육청의 청렴도는 지난해 대비 1등급씩 하락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종합청렴도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울산·인천·충북교육청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낮은 4등급을, 전남교

육청은 3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육청의 청렴체감도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청렴노력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이었다.

전남교육청의 청렴체감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등급, 청렴노력도는 1단계 하락한 3등급이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은 “시와 교육청의 정책들이 시민들과 거리가 멀고 자치구의 부패근절 정책이 보여주기 행사에 그친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광주 지방정치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렴도평가는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명이 설문에 참여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정성이 기자

나주시 화물차가 덤프트럭 추돌... 60대 남성 숨져

나주의 한 도로에서 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다.

19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22분께 나주 산포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62)씨의 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50대 B씨의 덤프트럭 후미를 추돌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구조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운전석에 갇혀있던 A씨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조산대 학교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준명 기자

광주비상행동 “韓대행 탄핵... 국정협의회 구성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17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 정범 한덕수의 즉각 탄핵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덕수는 민생 개혁과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 법안인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국회 증언 감정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을 가법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회처럼 점조직으로 연결된 암살부대와 군 정보라인이 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노상원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언제든 지 2계엄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이들 내란 세력의 도발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이 광장으로 모

여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 동조 국민회의 해체를 위한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국민회의와 한덕수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야당과 즉각 탄핵에 찬성한 모든 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정협의회를 추진하라”며 “시민사회와 야당 중심 국정협의회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논의장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명 기자

